

최신 판례예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부동산-5853, 2022.05.25

■ 질 의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 양도한 주택(B)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소득령 155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규재산-5317, 2022.04.08

■ 질 의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

서면상속증여-7722, 2022.03.23

■ 질 의

- 甲은 부로부터 '15.7.23. 영농농지(A)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함(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8천만원 전액 감면)
 - 만 5년 후인 '20.11.24. 부로부터 재차 영농농지(B)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9천만원)
 - A, B 농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기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질의

- 위와 같이 영농농지(B)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고 시, 5

- 년 전에 전액 감면받은 영농농지(A)와 합산 여부
(갑설) 합산 배제하여야 한다
- 영농농지(A)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감면한
도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합산 배제되어야 함
(을설) 합산하여야 한다
 - 감면한도액(1억원)과 별도로 동일인으로서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수단만 제공하는
통신판매수단 제공자는 중개업 면허 필요없음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소비-960, 2022.03.22

질 의

- 민원인은 온라인 플랫폼 ○○닷컴을 통해 전자제품의 판매 및 전자제품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최근 ○○닷컴 내 “○○○ 식품관”을 통해 (주)○○○ 등 식품회사와 연계하여 밀키트 등 식품류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음
- 민원인은 향후 (주)○○○○○와 제휴하여 ○○닷컴 내에 “와인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가 ○○닷컴을 통해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의 실물은 (주)○○○○○의 오프라인 매장인 와인○○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가는 형태임

질의

- 민원인이 자신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거래를 중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면허가 불필요하다면 ‘통신판매 수단 제공’의 범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통신판매 수단에 주류의 정보 및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 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